

“2021 충남도정에 바란다③: 농업인편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본 연구는 “2021년 충남도정에 바란다” 세 번째 기획시리즈 농업인편임. 연구 목적은 충남도 농민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충남도 농업·농촌·농민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올해 충남도 농정 방향과 정책지원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CONTENTS

1. 설문조사 배경 및 개요
2. 농업부문 설문결과
3. 농촌부문 설문결과
4. 농민부문 설문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요약

- 본 연구는 “2021년 충남도정에 바란다” 세 번째 기획 시리즈 농업인편임
 - 충남연구원은 2020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체, 소상공인, 농민, 청년을 대상으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충남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충남도 농민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설문조사는 지난 2월초에 실시됐고 설문내용은 농업, 농촌, 농민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주요 설문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난해 충남도 농가는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농형태로 차이가 있음. 벼재배 농가는 피해가 심했지만 축산농가는 좋았음. 따라서 정책지원에서도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촌마을 인구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감소와 일자리 부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셋째, 농민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과 질병으로 나타나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노인질병 문제에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난해 처음 지급된 농어민수당에 대해 대체로 만족을 하나 여성농민들은 개별지급을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01

설문조사 배경 및 개요

1. 설문조사 배경

- 충남연구원은 2020년부터 연초에 중소기업체, 소상공인, 청년, 농민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시리즈 형식의 “충남도정에 바란다”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음
 - 그 주요한 목적은 충남도의 주요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4개 집단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실태를 분석해 당해 연도 충남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매년 같은 조사를 반복해 실시함으로써 이들 4개 집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조응한 정책 마련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이번 “2021년 충남도정에 바란다③: 농업인편” 충남리포트는 그 일환으로 작성된 것임
- 충남도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그동안의 3농정책 추진과정을 점검 및 평가하고 추진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5개 분야 8대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¹⁾
 - 3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1)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재인식 및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국민 공감대 확산, 2)상향식 민관 협치농정 시스템 및 거버넌스형 농정 추진체계 기틀 마련, 3)유관기관·단체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방정부 미래농정 방향 제시
 - 3대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1)농가소득(3위) 및 임가소득(3위) 등 전국 상위권 안착, 2)전국 최초 농어민수당제 도입(농어가 165천가구, 농어가당 연 80만원) 등 소득안전망 강화, 3)빠르미, 비타베리 등 신식품종 개발로 종자강국 발판 마련

1) 충남도 3농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주요성과, 보완 사항 등은 “충남도 민선7기 후반기 3농정책 방향과 과제”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것임

- 이러한 성과에도 아쉬움은 있기에 충남도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 첫째,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에 대한 대응. 특히 청년인력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한계마을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
 - 둘째,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언택트 사회의 도래와 새로운 농정방향 제시
 - 셋째, 4차산업혁명시대, 농림어업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상품성 제고

- 따라서 이번 “2021년 충남도정에 바란다③: 농업인편”은 도내 330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충남도 민선7기 농정에 대해 농업, 농촌, 농민 부분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며 세부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 1)농업부문: 지난해(2020년) 농업경영 현황, 농업소득 변화 정도, 농업경영 변화 전망, 공익형 직불제 평가, 충남도 농정 방향, 농가의 농업경영 방향 등
 - 2)농촌부문: 농촌생활만족도, 마을인구 변화 정도, 마을인구 감소 원인, 농촌마을 현안문제, 도농격차 해결 방안 등
 - 3)농민부문: 농민의 고민거리, 농민복지 증진 방안, 농어민수당 평가 및 개선점 등
 - 기타 응답자 개인 정보: 성별, 연령, 영농형태, 참여사업 등

● 참고로 2020년과 2021년 충남도 주요 농정목표 및 중점과제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2020/2021년 충남도 주요 농정목표 및 중점과제

| 구분 | 2020년 | 2021년 |
|--------|---|--|
| 농정목표 |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안전망 확충 | 민관 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구축추진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인력 육성 체계 수립 |
| 중점과제 | 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안정 장치 강화 ② 균형있는 식량산업 육성 및 스마트 원예산업 선도 ③ 친환경농업 확산 및 충남 인삼산업 전략산업화 ④ 가뭄 극복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 ①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운영 ②3농정책 과제별 핵심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미래농정 포럼」운영 ③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확대 ④ 농협과 함께하는 3농정책 협력사업 지속 추진 ⑤여성·청년농업인 육성 및 사회적농업 가치 확산 ⑥충남형 농업농촌 중간지원조직 종합지원체계 구축 |
| 농산업 목표 | 농식품 유통 혁신으로 충남 농촌경제 활성화 | 농업·농촌 공익기능 강화,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확충, 미래 생명산업 육성 |
| 중점과제 | ① 먹거리 공급기반 확대를 통한 차별없는 먹거리 복지 향상 ② 농·특산물 국내 소비시장 창출 및 유통체계 혁신 ③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선순환 농촌경제 구축 ④ 농업 통상환경 변화 대응, 해외 마케팅 및 수출지원 확대 | ①농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 및 경영안정망 확충 ②충남쌀 경쟁력 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발작물 작목 다변화 ③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 구축 ④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
| 농촌목표 | 사람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 농촌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및 주민 밀착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삶의 질 제고 |
| 중점과제 | ① 농촌형 복지체계 강화 및 사회적농업 가치 확산 ②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 일자리 창출 ③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한 농촌 희망 마을 조성 ④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 ①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②농촌 생활SOC 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③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선순환 농촌경제 구축 ④지속가능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
| 임산업 목표 |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 실현 |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 구현 |
| 중점과제 | ① 경제·환경을 고려한 임산업 발전기반 구축 ②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및 휴양공간 확충 ③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으로 도민 생명·재산 보호 | ①산림자원관리로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 ②산림소득증대사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③녹색공간 확충, 녹색 복지서비스로 도민 행복 증진 ④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 안전 실현 |
| 축산업 목표 | 가축, 환경,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축산업 육성 | 지속가능한 청정 축산기반 조성 및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선제적 예방중심 방역 추진 및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 중점과제 | ① 「ASF·구제역·AI」 차단 특별방역 및 위험요인 최소화 ②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③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확보 ④ 과학 축산을 활용한 고품질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⑤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 먹거리 유통 | ①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②고품질 축산물 생산능력 강화 및 스마트 축산 육성 ③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안전축산물 공급 및 반려동물 적정관리 ④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차단 사전예방 방역체계 구축 ⑤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없는 「청정 충남」 유지 ⑥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감시체계 구축 |

2. 설문조사 개요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설문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조사목적 | 충남도 농업·농촌·농민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올해 충남도 농정의 방향과 지원과제를 제시 |
| 조사지역 | 충청남도 전체 15개 시·군 |
| 표본크기 | 330명(신뢰구간 95%, 표본오차 ±5.39%p) |
| 조사 내용 | 충남 농업·농촌·농민의 현황과 어려움, 향후 정책과제 |
| 자료수집방법 |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
| 조사대상자 | 충남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
| 조사기간 | 2021. 02. 01. ~ 2021. 02. 15(15일간)(조사실행기관: 선인리서치) |

3. 설문 대상자 일반 현황

- 설문대상자는 총 330명이며 성별, 연령별, 영농기간, 참여사업, 경영형태는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설문대상자 일반현황(n=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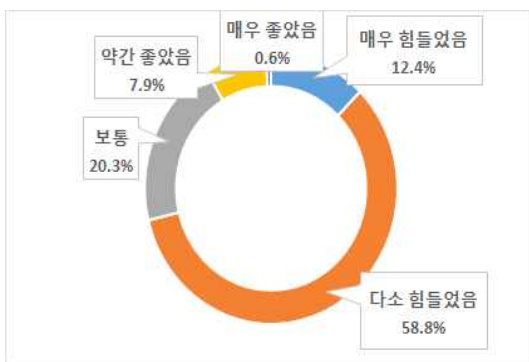
| 구분(=빈도) | | 비중 | 구분(=빈도) | | 비중 |
|----------|------------|-------|------------------------|---------------|--------|
| 성별 | 남자=184 | 56.4% | 참여 사업 (복수 응답) | 농산물 생산=330 | 100.0% |
| | 여자=144 | 43.6% | | 농산물 가공=87 | 26.4% |
| 연령 | 20대=1 | 0.3% | | 농산물 유통·판매=195 | 59.1% |
| | 30대=9 | 2.7% | | 농촌체험·관광=23 | 7.0% |
| | 40대=27 | 8.2% | | 농가 맛집(음식점)=12 | 3.6% |
| | 50대=88 | 26.7% | | 기타=5 | 1.5% |
| | 60대=141 | 42.7% | 직업 | 벼=14 | 4.2% |
| | 70대 이상=64 | 19.4% | | 벼·밭작물=167 | 50.6% |
| 영농 기간 | 5년 이하=5 | 1.5% | | 벼·시설원예=71 | 21.5% |
| | 6~10년=13 | 3.9% | | 시설원예=32 | 9.7% |
| | 11~20년=40 | 12.1% | | 벼·축산=33 | 10.0% |
| | 21~30년=91 | 27.6% | 축산=4 | 1.2% | |
| | 31~40년=112 | 33.9% | 기타=9 | 2.7% | |
| | 41년 이상=69 | 20.9% | | |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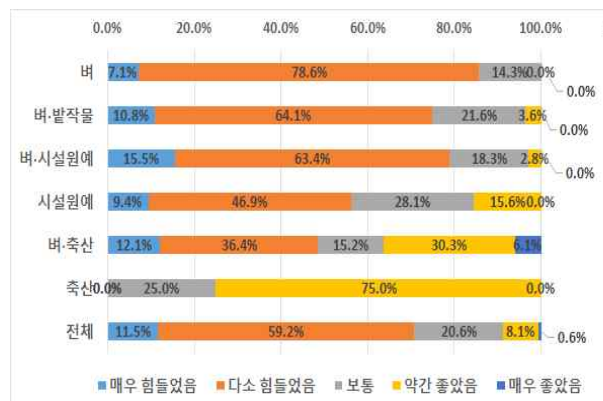
농업부문 조사결과

<농업경영>

- 지난해 충남 농가의 농업경영은 ‘힘들었다’는 응답이 71.0%로 높게 나타남
 - 지난해(2020년) 코로나19, 흉수 등으로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설문결과에서도 ‘다소 힘들었음’ 58.8%, ‘매우 힘들었음’ 12.4%로 대부분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조사결과 ‘힘들었다’는 응답은 30.8%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반면, ‘보통’ 20.3%, ‘약간 좋았음’ 7.9%, ‘매우 좋았음’ 0.6%로 나타남
- 지난해 농업경영형태별 경영 어려움 정도를 보면, 벼 농가의 85.7%가 어려웠다(매우 힘들었음 7.1%+다소 힘들었음 78.6%)고 응답함
 - 다음으로 벼·시설원에 농가의 78.9%, 벼·밭작물 농가의 74.9%, 시설원에 농가의 56.3%는 어려웠다고 응답함



[그림 1] 지난해 농업경영 어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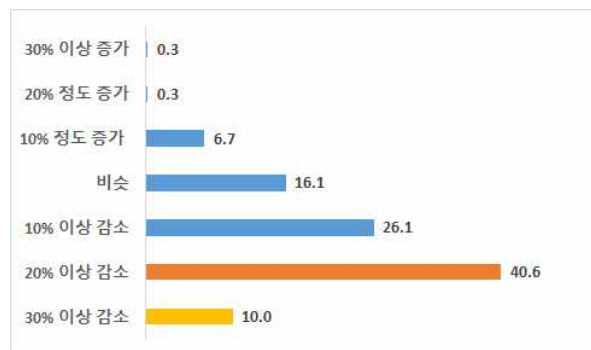


[그림 2] 농업경영형태별 경영 어려움 정도

- 반면, 축산 농가의 75.0%, 비·축산 농가의 36.4%는 지난해 농업경영이 좋았다(약간 좋았음+매우 좋았음)고 응답해 비재배 농가와 축산 농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년(2019년) 대비 지난해(2020년) 농가의 농업소득은 20% 정도 감소가 50.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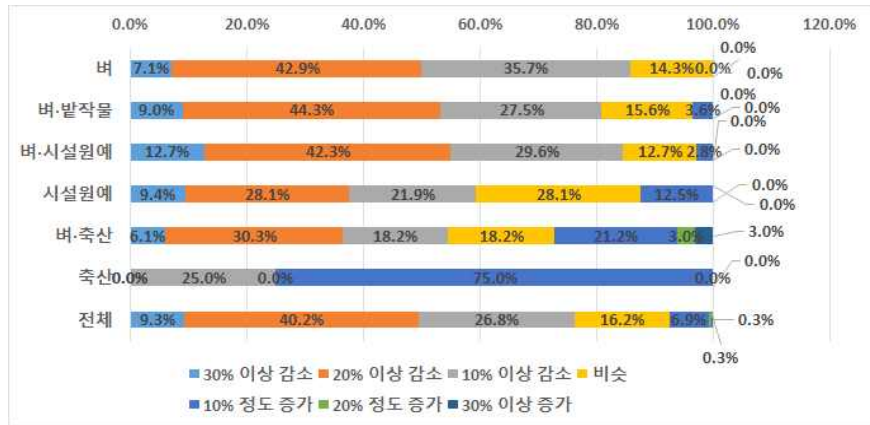
- 지난해 농가의 농업소득 현황을 보면, '10% 정도 감소'는 26.1%, '20% 정도 감소'는 40.6%, '30% 이상 감소'는 10.0%로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20% 이상의 소득이 감소함
-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10% 정도 감소 30.5%, 20% 정도 감소 3.8%로 나타나 2019년보다 2020년 농업소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학교급식의 중단, 외식 등의 감소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자연재해 발생 등이 발생해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비슷하다'는 16.1%, '10% 정도 증가' 6.7%, '20% 이상 증가' 0.6%로 일부 농가는 지난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증가함



[그림 3] 전년 대비 지난해(2020년) 농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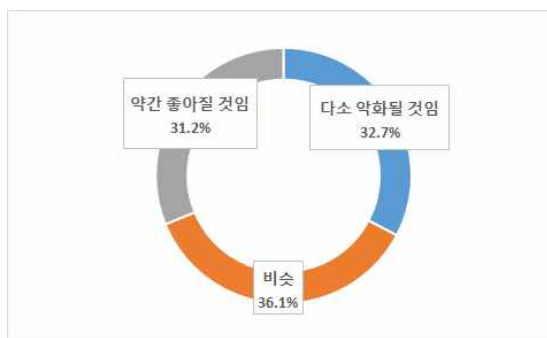
● 농업경영형태별 전년(2019년) 대비 지난해(2020년) 농업경영 어려움 정도를 보면, 비·시설원예 농가의 경우 경영수입 20% 이상이 55.0%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비·밭작물 농가의 경우 경영수입 20% 이상 감소가 53.3%, 비 농가는 50.0%, 시설원예 농가는 37.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축산 농가의 경우는 경영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없고 전체 75.0%가 경영소득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비·축산 농가는 24.5%가 10% 이상 경영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영농형태별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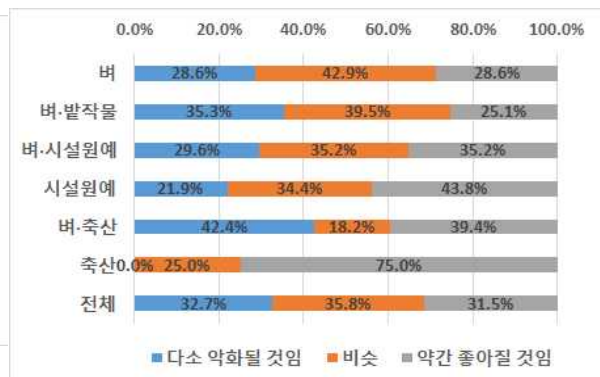


[그림 4] 전년 대비 지난해(2020년) 농업소득

- 올해 농가의 농업경영 환경은 악화된다는 응답이 좋아진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음
 - 작년과 비교해 올해 농가의 농업경영 환경에 대해 ‘다소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2.7%로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31.2%로 악화된다는 응답이 1.5%p 높았음
 - 반면,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가의 영농형태별 올해 농업경영 환경 전망을 보면, 벼·축산 농가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축산 전업농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 올해 농가의 농업경영 환경을 보면, 벼·축산 농가의 42.4%, 벼·밭작물 농가의 35.3%, 벼·시설원예 29.6% 순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반면, 축산 농가의 75.0%, 시설원예 농가의 43.8%, 벼·시설원예 농가의 35.2%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함



[그림 5] 올해 농가의 농업경영 환경 전망



[그림 6] 영농형태별 올해 농업경영 환경 전망

- 올해 농가의 농업경영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국산농산물 소비 증가'가 46.6%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학교급식 정상 회복'이 40.8%로 2위, '경기 회복'과 '정부지원 확대'가 37.9%로 공동으로 3위를 차지함

[표 4] 올해 농업경영 환경 개선 전망 이유(n=103)

| 항목 | 선택1 | 선택2 | 합계 | 순위 |
|-------------|-------|------|-------|----|
| 경기 회복 | 37.9 | 0.0 | 37.9 | 3 |
| 학교급식 정상 회복 | 28.2 | 12.6 | 40.8 | 2 |
| 판로 확대 | 25.2 | 11.7 | 36.9 | 5 |
| 정부지원 확대 | 8.7 | 29.1 | 37.9 | 3 |
| 국산농산물 소비 증가 | 0.0 | 46.6 | 46.6 | 1 |
| 합계 | 100.0 | 100 | 2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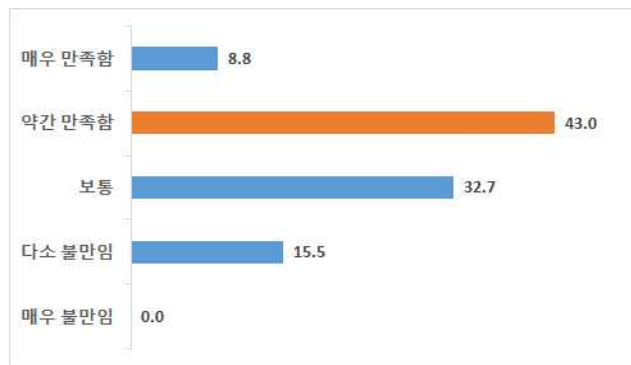
- 올해 농가의 농업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농산물가격 불안정'이 37.0%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판로 확보 부족'이 31.5%로 2위, '농산물 소비 둔화'와 '기후환경 변화'가 27.8%로 공동 3위, '인건비 상승'이 25.0%로 5위, '일손 부족'이 21.3%로 6위, '수입농산물 증가'가 20.4%로 7위를 차지함

[표 5] 올해 농업경영 환경 악화 전망 이유(n=108)

| 항목 | 선택1 | 선택2 | 합계 | 순위 |
|------------------|-------|-------|-------|----|
| 농산물소비둔화 | 27.8 | 0.0 | 27.8 | 3 |
| 수입농산물 증가 | 15.7 | 4.6 | 20.4 | 7 |
| 일손부족 | 16.7 | 4.6 | 21.3 | 6 |
| 인건비 상승 | 16.7 | 9.3 | 25.9 | 5 |
| 판로확보부족 | 12.0 | 19.4 | 31.5 | 2 |
| 농산물가격불안정 | 11.1 | 25.9 | 37.0 | 1 |
| 기후환경변화 | 0.0 | 27.8 | 27.8 | 3 |
| 후계인력부족 | 0.0 | 1.9 | 1.9 | 9 |
| 자금상황(운영, 시설자금부족) | 0.0 | 6.5 | 6.5 | 8 |
| 합계 | 100.0 | 100.0 | 2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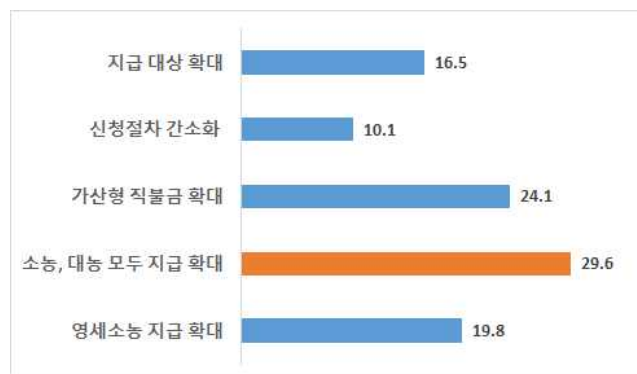
<공익형 직불제>

- 지난해 정부가 처음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만족함
 -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약간 만족함’ 43.0%, ‘매우 만족함’ 8.8%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반면, ‘보통’ 32.7%, ‘다소 불만임’ 15.5%로 불만족한 경우는 낮게 나타남



[그림 7] 정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평가

-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의 개선점으로는 ‘소농, 대농 모두 지급 확대’가 29.6%로 가장 높음
 - 현재의 공익형 직불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작목에 상관없이 0.5ha 미만 농가에서 12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함. 이에 대해 응답자의 29.6%는 소농뿐만 아니라 대농에게도 모두 지급 확대를 희망함
 - 다음 개선점으로는, ‘가산형 직불금 확대’ 24.1%, ‘영세소농 지급 확대’ 19.8%, ‘지급 대상 확대’ 16.5%, ‘신청절차 간소화’ 10.1%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정부 공익형 직불제의 개선점(n=328)

<충남도 농정 방향>

- 올해 충남도 농정의 중요 방향에 대해 ‘판로확대(온라인판매 등)’가 38.8%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6차산업화(가공·판매 등) 강화’가 38.8%로 2위, ‘농산물브랜드/마케팅 지원’이 37.9%로 3위, ‘생산품목 다각화 지원’이 34.5%로 4위, ‘신재배기술 도입 및 개발’이 32.7%로 5위, ‘친환경·유기농업 전환 지원’이 28.5%로 6위, ‘농업인력 지원’이 27.3%로 7위 등의 순위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농가는 충남도의 중요 농정의 방향으로 판매와 가공 분야의 정책을 가장 희망하며 ‘농업회의소 등 농업단체 지원’과 ‘3농정책위원회 역할 강화’는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올해 충남도 농정의 중요 방향에 관한 의견

| 항목 | 선택1 | 선택2 | 선택3 | 합계 | 순위 |
|-------------------|-------|-------|-------|-------|----|
| 생산품목 다각화 지원 | 34.5 | 0.0 | 0.0 | 34.5 | 4 |
| 판로확대(온라인판매 등) | 30.6 | 15.2 | 0.0 | 45.8 | 1 |
| 6차산업화(가공·판매 등) 강화 | 23.3 | 13.9 | 1.5 | 38.8 | 2 |
| 친환경·유기농업 전환 지원 | 3.3 | 19.1 | 6.1 | 28.5 | 6 |
| 농산물브랜드/마케팅 지원 | 4.5 | 20.6 | 12.7 | 37.9 | 3 |
| 신재배기술 도입 및 개발 | 2.1 | 16.1 | 14.5 | 32.7 | 5 |
| 친환경축산 지원(축분처리등) | 0.6 | 6.4 | 15.5 | 22.4 | 8 |
| 농업인력 지원 | 0.9 | 6.4 | 20.0 | 27.3 | 7 |
| 농업회의소 등 농업단체 지원 | 0.0 | 1.2 | 10.0 | 11.2 | 10 |
| 3농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 0.0 | 1.2 | 6.1 | 7.3 | 11 |
| 생산자 조직화/협업화 지원 | 0.0 | 0.0 | 13.6 | 13.6 | 9 |
| 합계 | 100.0 | 100.0 | 100.0 | 300.0 | |

<농가의 경영 방향>

- 올해 농가의 주요 농업경영 방향으로는 ‘생산규모 확대/축소’가 40.6%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브랜드/마케팅 개발’이 49.7%로 2위, ‘판로확대(온라인판매 등)’이 45.5%로 3위, ‘6차산업화(가공, 체험 도입)’이 40.6%로 4위, ‘생산품목 다각화’가 39.1%로 5위 등으로 순서로 나타남
 - 반면, ‘스마트팜/드론 등 활용’, ‘생산자 조직화/협업’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남

[표 7] 올해 농가의 주요 농업경영 방향

| 항목 | 선택1 | 선택2 | 선택3 | 합계 | 순위 |
|------------------|-------|-------|-------|-------|----|
| 생산품목 다각화 | 39.1 | 0.0 | 0.0 | 39.1 | 5 |
| 생산규모 확대/축소 | 38.2 | 20.0 | 0.0 | 58.2 | 1 |
| 6차산업화(가공, 체험 도입) | 9.7 | 10.9 | 20.0 | 40.6 | 4 |
| 판로확대(온라인판매 등) | 7.9 | 26.7 | 10.9 | 45.5 | 3 |
| 브랜드/마케팅 개발 | 2.4 | 20.6 | 26.7 | 49.7 | 2 |
| 신재배기술 도입 | 1.2 | 10.3 | 20.6 | 32.1 | 6 |
| 친환경/유기농업 전환 | 1.2 | 4.2 | 10.3 | 15.8 | 7 |
| 인력 증원/감축 | 0.3 | 5.2 | 4.2 | 9.7 | 8 |
| 농업 업종 전환(과수→축산) | 0.0 | 0.6 | 5.2 | 5.8 | 9 |
| 스마트팜/드론 등 활용 | 0.0 | 1.5 | 0.6 | 2.1 | 10 |
| 생산자 조직화/협업 | 0.0 | 0.0 | 1.5 | 1.5 | 1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300.0 | |

03 농촌부문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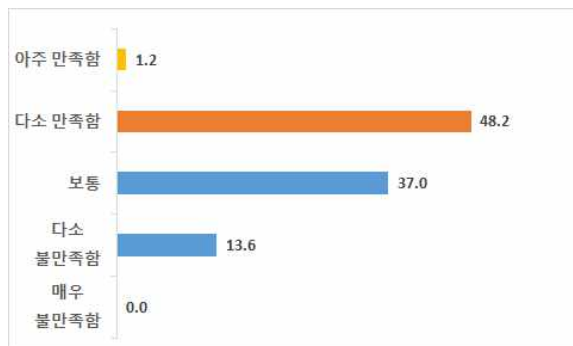
<농촌생활만족도>

● 농가의 절반은 농촌생활에 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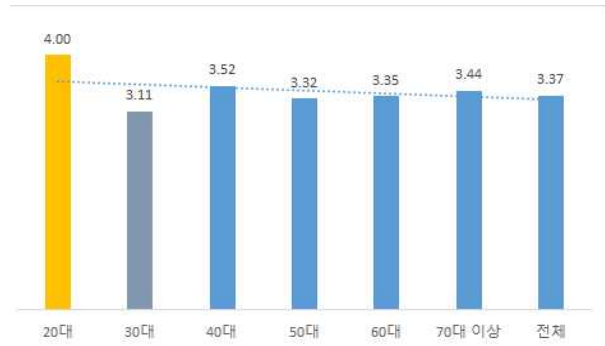
- 농가의 농촌생활 만족도를 보면, '다소 만족함'이 48.2%로 가장 높았고, '아주 만족함'이 1.2%로 나타남. 이 둘을 합하면 농가의 49.4%는 농촌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37.0%, '다소 불만족함'이 13.6%였고 '매우 불만족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농촌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음

- 연령별 농촌생활만족도를 보면, 20대가 4.00점(5척도)로 가장 높음. 반면 30대가 3.11점으로 가장 낮음. 이는 영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거나 부모와 함께 영농을 하고 있는 20대가 농촌생활에 대해 가장 만족한 반면,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는 30대는 농촌생활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 40대 이후를 보면, 40대가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3.32점으로 가장 낮았음. 하지만 40대 이후 연령대 모두 농촌생활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농가의 농촌생활 만족도



[그림 10] 연령별 농촌생활 만족도(5점 척도)

● 농가의 영농형태별 농촌생활만족도는 축산 농가가 가장 높았음

- 농가의 영농형태별 농촌생활만족도를 보면, 축산 농가가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벼 재배 농가가 3.64점, 벼·축산 농가가 3.48점, 벼·시설원예 농가가 3.42점, 시설원예 농가가 3.34점 순으로 나타남. 반면, 벼·밭작물 농가는 3.28점으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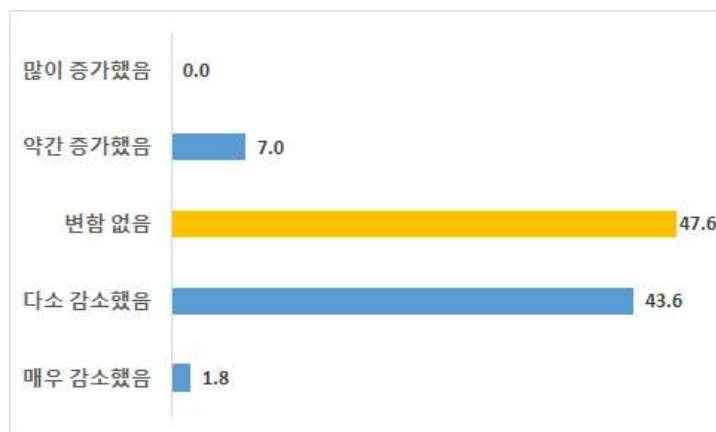


[그림 11] 영농형태별 농가의 농촌생활만족도(5점 척도)

<농촌마을 인구감소>

● 최근 5년간 농가의 농촌마을 인구는 변함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다소 감소했다는 응답도 많았음

- 최근 5년간 농가의 농촌마을 인구 변화에 관해 ‘변함없음’이 47.6%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다소 감소했음’이 43.6%, ‘매우 감소했음’이 1.8%로 대략 45.4%의 농촌마을에서 인구감소가 이뤄졌음
- 반면, 농촌마을 인구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7.0%로 일부 마을의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최근 5년간 농촌마을 인구 변화

● 농촌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득감소와 일자리 감소를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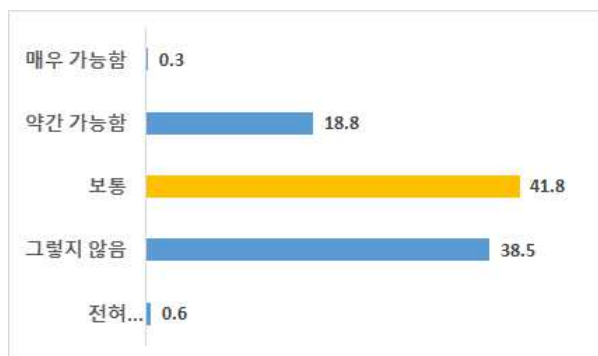
- 농촌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득 감소' 38.2%, '일자리 감소' 32.7%로 경제문제가 70.9%를 차지함
- 다음으로 '교육·문화시설 부족' 13.6%, '보건·의료시설 부족' 5.8%, '교통 불편' 3.6%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농촌마을 인구감소의 원인

● 농촌마을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마을 소멸' 가능성에 대해 가능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음

- 농촌인구 감소로 '농촌마을 소멸'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해 '보통이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음'이 38.5%로 나타남
- 반면, '농촌마을 소멸'에 대해 '약간 가능하다'는 응답은 18.8%, '매우 가능함' 0.3%로 대략 5개 중 하나의 마을은 농촌마을 소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14] 농촌마을 소멸가능성에 관한 의견

<도농격차 해소>

- 농촌마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는 ‘마을인구 증대’가 65.2%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마을공동급식 활성화’가 47.3%로 2위, ‘교통여건 개선’이 43.9%로 3위, ‘민주적 마을 운영’이 36.7%로 4위, ‘어르신 대상 교육 활성화’가 33.0%로 5위를 차지함
 - 반면, ‘노인(마을)회관 시설 보수’와 ‘귀농인과의 갈등 해결’은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표 8] 농촌마을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

| 항목 | 선택1 | 선택2 | 선택3 | 합계 | 순위 |
|----------------|-------|-------|-------|-------|----|
| 노인(마을)회관 시설 보수 | 24.2 | 0.0 | 0.0 | 24.2 | 7 |
| 마을공동급식 활성화 | 38.2 | 9.1 | 0.0 | 47.3 | 2 |
| 마을인구 증대 | 32.4 | 30.0 | 2.7 | 65.2 | 1 |
| 어르신 대상 교육 활성화 | 1.2 | 22.1 | 9.7 | 33.0 | 5 |
| 민주적 마을 운영 | 2.7 | 18.2 | 15.8 | 36.7 | 4 |
| 교통여건 개선 | 1.2 | 15.2 | 27.6 | 43.9 | 3 |
| 쓰레기처리 등 환경 개선 | 0.0 | 5.5 | 20.3 | 25.8 | 6 |
| 귀농인과의 갈등 해결 | 0.0 | 0.0 | 23.9 | 23.9 | 8 |
| 합계 | 100.0 | 100.0 | 100.0 | 300.0 | |

- 도시와 농촌 간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육·문화시설 확대’를 1순위로 꼽음
 -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육·문화시설 확대’가 54.1%로 1위를 차지함. 이는 도시와 농촌 간 교육 및 문화시설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일자리 확대’가 47.0%로 2위, ‘보건·의료시설 확대’가 46.7%로 3위, ‘농촌거주사당(기본소득) 지급’이 42.7%로 4위, ‘농업지원정책 확대’가 39.4%로 5위, ‘읍·면소재지 활성화’가 37.9%로 6위, ‘귀농·귀촌정책 강화’가 20.0%로 7위, ‘농어촌학교 지원 강화’가 13.0%로 8위를 차지함

[표 9] 도시와 농촌 간 발전격차 완화 방법

| 항목 | 선택1 | 선택2 | 선택3 | 합계 | 순위 |
|-----------------|-------|-------|-------|-------|----|
| 농업지원정책 확대 | 39.4 | 0.0 | 0.0 | 39.4 | 5 |
| 교육·문화시설 확대 | 42.4 | 11.8 | 0.0 | 54.2 | 1 |
| 보건·의료시설 확대 | 14.5 | 30.0 | 2.1 | 46.7 | 3 |
| 농촌거주수당(기본소득) 지급 | 2.4 | 26.7 | 13.3 | 42.4 | 4 |
| 읍·면소재지 활성화 | 1.2 | 19.4 | 16.4 | 37.0 | 6 |
| 일자리 확대 | 0.0 | 11.2 | 35.8 | 47.0 | 2 |
| 귀농·귀촌정책 강화 | 0.0 | 0.9 | 19.1 | 20.0 | 7 |
| 농어촌학교 지원 강화 | 0.0 | 0.0 | 13.0 | 13.0 | 8 |
| 기타 | 0.0 | 0.0 | 0.3 | 0.3 | 9 |
| 합계 | 100.0 | 100.0 | 100.0 | 300.0 | |

04

농민부문 조사결과

<농민의 고민거리>

- 현재 농민의 가장 큰 고민으로는 ‘건강과 질병’이 가장 높음
 - 현재 농민의 가장 큰 고민으로는 ‘건강과 질병’이 36.7%로 가장 높음. 그만큼 고령화로 인해 농민들은 건강과 질병에 대해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농업소득 감소’가 30.3%로 2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28.5%로 3위, ‘안정적 노후생활’이 26.7%, ‘주민화합과 인간관계’가 26.4%로 5위, ‘생활비 부족’이 24.8%로 6위, ‘영농후계자’가 15.2%로 7위, ‘부모와 자녀 돌봄’이 11.5%로 8위를 차지함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가뭄과 홍수, 그리고 냉해 피해가 빈번하면서 농가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농가의 고민과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0] 농민의 가장 큰 고민

| 항목 | 선택1 | 선택2 | 합계 | 순위 |
|------------|-------|-------|-------|----|
| 농업소득 감소 | 30.3 | 0.0 | 30.3 | 2 |
| 생활비 부족 | 22.4 | 2.4 | 24.8 | 6 |
| 건강과 질병 | 25.5 | 11.2 | 36.7 | 1 |
| 부모와 자녀 돌봄 | 7.6 | 3.9 | 11.5 | 8 |
| 주민화합과 인간관계 | 5.5 | 20.9 | 26.4 | 5 |
| 영농후계자 | 3.6 | 11.5 | 15.2 | 7 |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 5.2 | 23.3 | 28.5 | 3 |
| 안정적 노후생활 | 0.0 | 26.7 | 26.7 | 4 |
| 합계 | 100.0 | 100.0 | 200.0 | |

<농민복지 증진 방안>

-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농업인연금 확대’와 ‘노인수당 확대’가 각각 1, 2위를 차지함
 -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농업인연금 확대’가 63.6%로 1위를 차지했고, ‘노인수당(노인기초연금) 확대’가 2위를 차지함. 농민들은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연금의 확대가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다음으로 ‘인근지역 의료시설 확충’이 24.8%로 3위,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바우처 등)’이 23.3%로 4위, ‘돌봄 및 교육서비스 확대’가 21.8%로 5위, 마을회관 시설 확충이 13.9%로 6위,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가 10.3%로 7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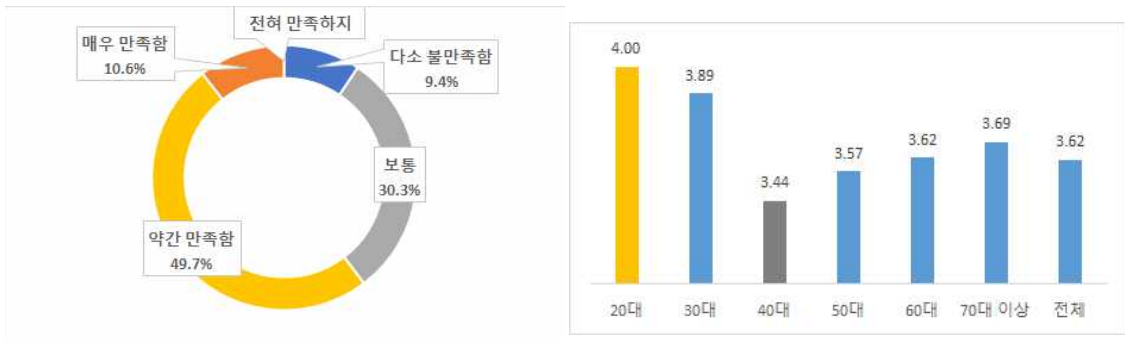
[표 11] 농민 복지 증진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 항목 | 선택1 | 선택2 | 합계 | 순위 |
|--------------------|-------|-------|-------|----|
| 인근지역 의료시설 확충 | 24.8 | 0.0 | 24.8 | 3 |
| 농업인연금 확대 | 53.6 | 10.0 | 63.6 | 1 |
| 노인수당 확대 | 14.8 | 27.3 | 42.1 | 2 |
| 돌봄 및 교육서비스 확대 | 5.5 | 16.4 | 21.8 | 5 |
| 마을회관 시설 확충 | 0.6 | 13.3 | 13.9 | 6 |
|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바우처 등) | 0.6 | 22.7 | 23.3 | 4 |
|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 0.0 | 10.3 | 10.3 | 7 |
| 합계 | 100.0 | 100.0 | 200.0 | |

<농어민수당 평가 및 개선 사항>

- 지난해 처음 실시한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60.3%가 만족한다고 평가함
 - 충남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농어가당 80만 원(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을 지급한 농어민수당에 대해 ‘약간 만족함’이 49.7%, ‘매우 만족함’이 10.6%로 전체 농민의 60.3%가 만족한다고 평가함
 - 반면, ‘보통이다’는 의견은 30.6%, ‘다소 불만족함’ 9.4%로 나타났고 ‘전혀 만족하지 못함’은 0.0%로 나타남

- 연령별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평가 결과 20대에서 4.00(5점 척도)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3.44점으로 가장 낮음
 - 20대 다음으로는 30대에서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70대 이상이 3.68점, 60대가 3.62점, 50대가 3.57점 순으로 나타남. 전체적인 만족도는 3.62점으로 나타남



[그림 15] 충남 농어민수당에 대한 평가 [그림 16] 연령별 농어민수당에 대한 평가(5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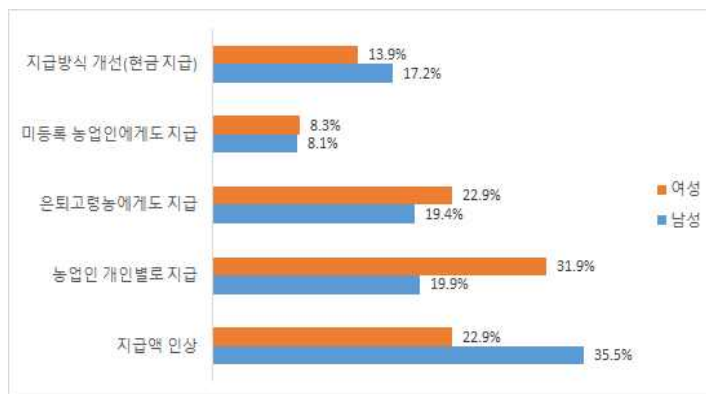
- 충남도 농어민수당의 목적으로 ‘농어촌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충남도 농어민수당의 목적으로 ‘농어촌인구 감소 대응’이 30.0%로 가장 많았음. 농어민수당이 본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가장 큰 목적임에도 농민들은 농어민수당을 농어촌인구 감소 대응이라고 여김. 그만큼 농업·농촌에서의 현안문제는 인구감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도농 소득격차 해소’ 25.2%,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22.7%, ‘농어업·농어촌의 유지’ 13.9%, ‘안전한 먹거리 생산’ 8.2% 순으로 나타남
- 충남도 농어민수당의 가장 큰 개선점으로는 ‘지급액 인상’이 가장 많음
 -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개선점으로 ‘지급액 인상’이 30.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농업인 개인별로 지급’ 25.2%, ‘은퇴고령농에게도 지급’ 20.9%, ‘지급방식 개선(현금지급)’ 15.8%, ‘미등록 농업인에게도 지급’ 8.2% 순으로 나타남. 농업인경영체등록이 안 된 은퇴고령농에 대해서는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농사는 짓고 있으나 농업인경영체등록을 하지 않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농어민수당의 목적

[그림 18] 농어민수당의 개선점

- 성별 충남도 농어민수당의 가장 큰 개선점을 보면, 남성은 ‘지급액 인상’, 여성은 ‘농업인 개인별 지급’이 가장 높았음
 - 성별 농어민수당의 개선점을 보면, 남성은 ‘지급액 인상’이 35.5%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농업인 개인별 지급’이 31.9%로 가장 높았음.
 - 이는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그림 19] 성별 농어민수당 개선점

4. 충남도 농정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 금년도 충남도 농정에 대한 농가의 의견 및 건의사항으로 소득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함
 - 의견 및 건의 내용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내용으로는 농어민수당 확대, 농업인 연금 확대, 농업인 국민연금 현실화, 귀농·귀촌인 소득안정화, 농업직불금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과 관련된 내용임
- 농업지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강화를 요구함
 - 농가는 농산물 판로확대, 보조사업 확대, 저소득 농가 지원 영농자금 대출이자 감면 등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을 희망함
 -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금의 현실화를 제기함. 이는 지난해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가의 피해의 영향으로 해석됨
- 농민들은 충남도 농정에 대해 보건·의료, 문화·교육 시설 확대,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강화 등을 요구함
 -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함. 이에 대해 농민들은 교통환경 개선, 교육·문화시설 및 기회 확대, 의료·보건시설 확대, 독거노인 등 돌봄서비스 강화, 마을회관 시설 개선 및 마을공동급식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그림 20] 충남 농정에 대한 농가의 의견 및 건의사항 워드클라우드 분석

[표 12] 충남도 농정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 구분 | 의견 및 건의 내용 | 키워드 |
|----|--|-------------|
| 1 | 가업계승농가 혜택 지원책 필요 | 영농후계 |
| 2 | 각종 농업정책 지원 대상 확대/세대분리된 미혼자녀에게도 농업인 수당 지급 | 농어민수당 |
| 3 | 고령 노동자 연금/농업인 연금 필요/농업인 연금 확대/농업인 국민연금 현실화 | 연금 |
| 4 | 고령화에 따른 인력지원 제도화 필요/농번기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필요/농촌 인력 지원필요 | 영농인력 |
| 5 | 교통환경 개선 | 교통 |
| 6 | 귀농 귀촌인 소득인정화 제도 지원필요/귀농,귀촌 지원정책 강화필요/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 다양화 | 귀농·귀촌 |
| 7 | 기후변화에 대한 보상금 확대/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농민 지원/농업재해 보상 확대/자연재해 농산물 보상 지원확대/자연재해 보상제도 확대/자연재해 보상 현실화/재해농가에 대한 피해지원 확대/재해작물 피해보상 지원 | 기후변화, 재해 보상 |
| 8 | 노인수당 확대 | 연금 |
| 9 | 농업인 직불제 상향/직불제 금액 상향/농업인 지급액 인상/농업인 지급액 인상 확대 | 직불금 |
| 10 | 농민단체 활성화 지원 | 농민단체 |
| 11 | 농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정책 제도 필요/농촌 현실에 맞는 지원확대 | 정책현실화 |
| 12 | 농산물 공동판매 시설 확대/농산물 공동판매 실시/지역 농수산물 판매장 확대/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이 더 많아져야함/지역특산품 판매장 확대 | 농산물판매 |
| 13 | 농산물 판로 다양화 필요/지역 특산품 판매 확대/지역 판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 농산물판매 |
| 14 | 농어민 수당 현금으로 지급 | 농어민수당 |
| 15 | 농어촌 문화시설 건립/문화지원정책 다양화 필요/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교육문화시설 확대/농촌지역 평생교육시설 확충 필요 | 교육·문화 |
| 16 | 농어촌 보건, 의료시설 확충 필요 | 보건·의료 |
| 17 | 농업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보조사업 |
| 18 | 농업 관련 예산 상향/농업부문 예산 확대지원/농업부분에 대한 예산확대/농업예산 확대 | 예산확대 |
| 19 | 농업 쓰레기 적극적 처리해 주었으면/쓰레기 처리 조속 처리 | 쓰레기처리 |
| 20 | 농업인 소득격차 해소 필요/저소득 농가 지원확대 | 소득지원 |
| 21 | 농한기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필요 | 소득창출 |
| 22 | 독거노인 응급의료 시스템화 필요/찾아가는 노인건강 지원서비스 강화 | 독거노인 |
| 23 | 돌봄, 교육서비스 지원정책 확대 필요 | 돌봄서비스 |
| 24 | 마을공동급식제도 활성화 | 마을공동급식 |
| 25 | 마을회관 현대화 등 농촌 복지서비스 확대 | 마을회관 |
| 26 | 벼수매가 인상 | 벼수매가 |
| 27 | 소규모 농가 판로지원 정책 제도화 필요 | 판로확대 |
| 28 | 시설영농자금 지원강화/시설원에 시설비용 적극지원 | 시설원에 |

| | | |
|----|---|--------|
| 29 | 시설원에 난방비 지원/시설원예용 전기요금 인하 | 난방비 |
| 30 | 보험료 지원사업 적극적으로 | 보험료 |
| 31 |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여성농업인 지원강화/여성농업인 지원제도 다양화 | 여성농업인 |
| 32 | 영농교육 시 현장교육이 더 많아지길 바람/영농교육 현장 교육 필요 | 영농교육 |
| 33 | 영농자금 대출이자 감면 | 영농자금 |
| 34 | 외국인노동자 임금 인하 필요 | 외국인노동자 |
| 35 | 젊은 축산인 양성 교육 및 지원/청년농업인 육성 강화/청년의 농촌정착 자금 지원 등 필요 | 청년농업인 |
| 36 | 종묘의 국산개발 장려 | 종자·종묘 |
| 37 | 지역 특성에 맞는 농작물 공동재배사업 실시 | 농작물 |
| 38 | 직불제 신청방법이 간단해야 함 | 농업직불금 |
| 39 | 축산농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적극적으로 | 전염병예방 |
| 40 | 축산농가 규제완화 | 축산농가 |
| 41 | 축산폐기물 친환경 처리시설 필요 | 축산폐기물 |
| 42 |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어구 |
| 43 | 친환경 영농기술 교육 다양화 | 영농기술 |
| 44 | 특산품 홍보관 필요 | 농산물판매 |

05 결론 및 시사점

- 충남도 농민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2021년 충남도정에 바란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난해 충남 농가는 대다수가 어려웠지만 영농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지원정책에서도 이에 맞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충남 농가의 71.0%는 지난해 힘들었다고 응답함. 지난해는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힘들었지만 농민도 특히 어려움이 많았음
 - 하지만 영농형태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는 큰 차이가 났음. 특히 벼 전업농가, 벼·시설원예 농가가 더 어려웠음. 반면, 축산농가는 어려움보다 좋았다는 응답이 많아 대조적임
 - 따라서 농업지원정책에서도 축산농가보다는 벼·시설원예, 벼·밭작물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농가는 올해 충남도 중요 농정의 방향으로 농산물 가공과 판로를 희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함
 - 농가는 올해 충남도 중요 농정의 방향으로 1순위 판로확대(온라인판매 등), 2순위 6차산업화(가공·판매 등) 강화, 3순위 농산물브랜드·마케팅 지원 등을 꼽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함
 - 농가 또한 올해 농업경영의 방향으로 1순위 생산규모 확대/축소, 2순위 브랜드·마케팅 개발, 3순위 판로확대(온라인판매 등) 등을 꼽고 있어 이에 맞는 정책 강화 및 개발이 필요함

- 셋째,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인구가 감소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소득감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설문응답자의 45.4%는 마을인구가 감소하다고 응답한 반면, 7.0%는 증가해 대조를 이룸. 마을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소득감소 38.2%, 일자리 감소 32.7%로 나타나 소득문제, 경제적 문제 해결이 인구감소 해결에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임
 - 또한 인구감소 문제 외 농촌마을의 시급한 현안문제로 마을공동급식 활성화, 교통여건 개선, 민주적 마을운영 등도 꼽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함

- 넷째, 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과 질병, 농업소득 감소로 나타나 농가 고령화문제에 조응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1순위 건강과 질병, 2순위 농업소득 감소로 나타나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가인구에 알맞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3순위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나타나 최근 잦은 자연재해에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보상 및 안정적 영농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본 설문조사에 농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농업인연금 확대와 노인수당(노인기초연금) 확대를 꼽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 논의가 필요함

- 다섯째,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농업인 개별지급에 대한 요구도 높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지난해 처음 지급한 농어민수당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60.3%로 비교적 높았음. 특히 20대와 30대 농가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성별로 농어민수당 개선점을 보면, 남성은 지급액 인상을 1순위로 꼽은 반면, 여성은 농업인 개인별 지급을 1순위로 꼽아 차이가 있음. 농어민수당을 경영주가 아닌 농가 내 모든 농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참고 자료>

김기흥·강마야·김도경. 2020. 2020년 충청남도정에 바란다②: 농업인편.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충청남도. 2021. 3농정책위원회 회의자료

충청남도. 2021. 민선7기 후반기 3농정책 방향과 과제: 더 행복한 변화 3농정책

작성자: 박경철(kcpark@cni.re.kr)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참고: 충남도 농업통계 자료>

1. 충남도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현황(단위: 천호, 천명, 명)

| 구분 | 농가호수(천호) | | 농가인구(천명) | | 호당인구(명) | |
|------|----------|-----|----------|-----|---------|------|
| | 전국 | 충남 | 전국 | 충남 | 전국 | 충남 |
| 2019 | 1,007 | 120 | 2,245 | 263 | 2.2 | 2.2 |
| 2015 | 1,088 | 132 | 2,569 | 308 | 2.36 | 2.33 |
| 2010 | 1,177 | 151 | 3,063 | 394 | 2.60 | 2.61 |

출처: 통계청, 충남도농업기술원

2. 충남도 연도별 농가소득(단위: 천원)

| 연도 | 충남 | | | | | 전국 | | | | |
|------|--------|--------|--------|--------|-------|--------|--------|--------|--------|-------|
| | 계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계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 2019 | 44,019 | 12,191 | 17,931 | 11,244 | 2,653 | 41,182 | 10,261 | 17,327 | 11,230 | 2,364 |
| 2015 | 34,717 | 10,337 | 13,156 | 8,017 | 3,208 | 37,215 | 11,257 | 14,939 | 7,906 | 3,114 |
| 2010 | 33,220 | 9,672 | 13,648 | 4,532 | 5,368 | 32,121 | 10,098 | 12,946 | 5,610 | 3,467 |

출처: 통계청, 충남도농업기술원

3. 충남도 연도별 경지면적(단위: 천ha)

| 구분 | 계 | | 논 | | 밭 | |
|------|-------|-----|-----|-----|-----|----|
| | 전국 | 충남 | 전국 | 충남 | 전국 | 충남 |
| 2019 | 1,581 | 210 | 830 | 146 | 751 | 64 |
| 2015 | 1,679 | 219 | 908 | 152 | 770 | 66 |
| 2010 | 1,715 | 234 | 984 | 169 | 731 | 65 |

출처: 통계청, 충남도농업기술원